



낮에도 전조등을 켜시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지부장 정성인)와 삼성화재 호남본부(본부장 성기재) 직원들이 28일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운전자들을 상대로 '주간 전조등 켜기' 등 안전운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달 18일까지 전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돛구장 부지 어디냐” 관심 폭발

## 테마타운 함께 조성...개발 붐 예상 서·북구 그린벨트 해제지역 유력

광주시가 돛구장 건립을 추진키로 확정하면서 구장이 어디에 들어설 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물론 광주시 관계자들도 돛구장 부지에 대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건립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박 시장이 투기 등을 우려해 29일 기자회견을 비롯해 포스코 건설과의 돛구장 건설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상 부지를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유력한 대상지로는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이 꼽히고 있다. 광주 시내 일반 용지 가운데 현실적으로 2만5

천~3만석 규모의 돛구장을 지을 땅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또 광주시가 야구장 건립과 함께 이 일대를 복합테마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뤄 그만큼 규모의 사유지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광주시와 함께 돛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대구시의 경우 3만석 규모(부지 12만㎡) 돛구장과 함께 10만㎡ 규모의 워터파크를 유치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그린벨트 해제 예정 지역의 경우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데다, 땅 매입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광주시

와 부지매입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건설사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맞춰 광주시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 지역 그린벨트 7.52km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설에 무게를 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이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 중 특히 교통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돼 접근성이 뛰어난 북구와 서구 일대가 야구장 신축 부지로 부상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도로나 지하철 노선 등 접근성이 야구장 입지로 적합하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7일 기자들을 만나 “야구장 건립부지로 현재 2곳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예정 지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일반 사유지를 야구장 부지로 낙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대규모 사유지

매입에 나설 경우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부담이지만, 행정절차를 밟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지가상승, 투기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가 사유지를 대상부지로 정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이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전면 매수방식의 공영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구장 건립과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것도 시로서는 부담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8일 “돛구장과 함께 상업 공간 등 복합테마타운이 건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돛구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신도시로 부상하지 않을까는 관측이 있다”며 “돛구장 건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사·출생 등 생활민원 한꺼번에 처리

###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 일괄서비스' 추진

이사나 사망, 출생, 혼인 등 생활민원을 볼 때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개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패키지화) 인터넷을 통해 일괄 신청·처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28일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금은 이사를 할 경우 주민센터나 시·구청, 교육청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정정신고, 초등학교나 중·고교 전·편입학 배정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등 많게는 22종의 민원을 개별 처리해야 한다. 부모 등의 사망 때에도 유족연금 신청이나 영양금·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각각 처리해야 해 불편함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이들 민원을 온라인화해 민원인이 정부민원 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 접속해 해당 민원 일괄서비스 메뉴에서 항목과 내용 등을 기입하고 나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민원인은 처리 결과를 G4C에서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처리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일괄서비스 대상은 이사·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 사망과 출생·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 장애인과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우선 12월말까지 이사와 사망 등 2종의 일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말에 장애인·보훈·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교육·취업·고용안정·산재보험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혼인·소자본 창업·기초생활수급·임양 등 5종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제공되면 민원인의 교통비와 시간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연간 2천770억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찬우 행안부 조직실장은 “IT(정보기술) 강국에 걸맞는 세계 일류수준의 선진 민원서비스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금융 등 민간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등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왼쪽)와 향후의 민원처리 개념도. /연합뉴스

## 포스코 건설, 광주 돛구장 투자 예

국내 굴지의 기업인 포스코 건설이 광주시·대구시에 각각 4천억원 규모의 돛구장 야구장을 건립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기업의 특성상 사업적 타당성 검토가 우선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배경을 포스코 건설의 모회사인 포스코와 박광태 광주시장과 인연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박 시장이 16대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포스코 건설의 모기업인 포스코를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한 보은의 성격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당시 포스코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 공기업적 이미지에 박시장과 인연 작용?

출자를 받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 측은 사업 협상 과정에서 부산시 측의 돛구장 건립 제안도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사업파트너가 된 데도 박 시장이 역할이 일정부분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 또 포스코가 공기업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할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게는 호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종만 광주시행정부시장은 지난 27

일 “포스코 건설이 사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철골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돛구장을 국내 최초로 건설해 모기업인 포스코의 이미지를 높이고 자사의 기술력을 홍보하려는 포스코 건설의 복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 건설은 29일 광주시·대구시와 돛구장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軍, 탄약고 인근 지역 야구장 건설 허용

탄약고 인근에 야구장과 골프장 건설이 허용되고 군부대 연병장 지하에 주차장과 사격장 등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군사보호구역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따르면 탄약고 주변지역에 소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는 간이 야구장과 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의 건설이 허용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확정 방식을 군부대 '외곽

기준'에서 군부대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조정하고 비행장 주변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고도제한을 위한 비행장연접영향평가의 절차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2011년부터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분배산세를 감면 조정할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보호구역내 주택을 신·증축할 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협의업무 위탁구역'을 올해 1.5억㎡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1천㎡으로 이는 전 국토 대비 9.1%에 해당한다. /연합뉴스